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5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2월 12일(수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멈춰라 민영화-연금개악!
힘내라 민주주의!

2월25일 국민총파업

노조파괴 해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박근혜 정권, 벌써 1년

2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다. 박근혜 정권이 정확히 1년 되는 이 날, 민주노총은 국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단 1년 밖에 되지 않은 정권을 상대로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 의혹, 공약 파기, 노조 말살, 통상임금 떼먹기 등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민주주의 파탄, 민생 파탄을 단 1년만에 이뤄냈기 때문이다. 노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국민’ 총파업이다.

정권이 이 지경이니 사법부도 자본 감싸기

이런 정권 아래에서는 사법정의도 온데간데 없다. 검찰은 아주 노골적인 자본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노동부 수사 결과는 사업주 구속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부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전국의 노조파괴 사업장 5곳의 검찰 수사결과, 구속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미 노조파괴는 사업장을 넘어 정권이 깊숙이 관련된 범죄이다. 노동부, 경찰, 검찰, 국정원, 청와대까지 어디 하나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정권과 싸워야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2.25 국민 총파업에 우리는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정권이 더 이상 노조파괴 범죄를 감쌀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성, 엔텍,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복수노조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넘어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많은 노조들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수많은 노조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철도노조도 2.25 파업을 다시 한 번 준비하고 있다. 노동조합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국민파업위원회를 구성해 농민, 빈민, 중소기업들까지도 포함하여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쏟아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2월 25일 공장을 벗어나 민중들과 함께 하자.

노조파괴 진짜 끝장을 뽐시다.

2.25 국민총파업에 나섭시다!

검찰이 싸지른 오물은 검찰이 직접 치워야

금속노조는 지난달 21일 노조파괴 사건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꼼꼼히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수사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떻게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노조파괴 사건을 무마할 건지만 꼼꼼히 조사한 것 같다. 1차 수사기관인 노동부가 증거들을 수집해서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했는데도, 검찰은 노동부 의견마저 깡그리 무시했다.

노조파괴를 자문해줬던 창조건설팅과 소속 노무사들은 설립취소,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용역깡패들도 부족하나마 일부 기소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직접 실행한 사업주들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나서서 감싸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을 위해서라면 검찰이 법과 원칙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집단이 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노동부의 구속 의견을 검찰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묵살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노조파괴 사건 재수사는 이제 대전고등검찰청이 결정한다. 대전지검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대전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노조파괴 사건의 수사결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검찰의 위신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대전고검은 지검의 검사들이 벌여놓은 잘못을 이제라도 제대로 수습할 생각으로 재수사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검찰에게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삼성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약속’

예매율, 점유율은 1위인데 극장에서는 상영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영화가 있다. 왜 장사가 잘되는 데도 극장은 피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삼성’을 비판하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그 주인공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다니던 젊은 여성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삼성자본에게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은 부품이 고장난 것에 불과한 일이었다. 반도체 산업의 위험하고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그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노동자의 목숨으로 지금의 부를 쌓아올린 게 삼성 자본이다.

영화는 이런 현실을 그렸다. ‘삼성공화국’, ‘삼성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사회에서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렸다. 그러자 역시 예상됐던 탄압이 쏟아졌다. 극장들은 상영을 거부하고, 어떠한 영화 프로그램도 이 영화를 소개하지 않는다. 유명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공화국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영화는 조용하지만 강한 흥행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부조리한 삼성공화국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약속’ 영화보기 운동을 통해 삼성공화국에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는 싸움을 시작하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법원이 2009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노동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1심 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법원은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을 인정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등 2009년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회사가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한 당시 생산성 문제 등도 정리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고 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적법성이 불분명하며 회계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금감원 등은 지금껏 노조가 제기해 온 회계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최근 부당한 사법부 판결이 많았는데 회계조작을 인정하고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하지만 이미 스물 네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기가막힌 심정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회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원상회복을 회피하지말고 지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2.4 삼성서비스지회 파업투쟁>



<2.7 총파업 조직 출근투쟁_코스모링크>



<2.7 촛불집회_삼성서비스 조합원들>



<2.8 보쉬전장지회 총회 및 수련회>